

전매광장



박문옥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3년 전 집수리 봉사활동을 위해 한 아파트를 찾았다. 지어진 지 50년이 된 아파트는 외관 곳곳에 굵은 균열이 있었고 창호와 출입문은 성한 곳이 없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조명시설이 망가진 좁은 복도까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보통의 아파트와는 많이 다른 모습... 해당 호수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자 천정은 쏟아질 듯 내려앉아 있었고, 곳곳에 빗물이 침투한 얼룩 자국, 그리고 습기를 머금은 실내는 곰팡이로 인한 냄새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

사업성 없어 재개발 지연

아파트 대부분 입주민은 이미 그곳을 떠났고, 당시 남은 주민들은 기초수급자 가구와 장애를 가진 주민,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이 대부분이다. 아쉽게도 우리가 방문했던 그 가구는 필자가 속한 봉사단체 예산으로 돕는 일은 불가능했기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비용이 될 들어가는 가구를 선택해야만 했다.

2022년,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파트는 그대로 존재해 있다. 그 사이 건물은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더 낡았고 당시 살았던 주민들도 아직 그대로 살고 있다.

재해위험 공동주택과 입주민 안전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왜 이곳은 이대로 남아 있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사업성 때문이다. 부지가 넓으면 재개발을 시행해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불량등급(E등급) 건축물들은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 재건축을 위한 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에 민간업자가 쉽게 도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개인의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에 지자체의 고심도 한번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은 온전히 그들의 결정에 맡겨놓아야 할 것인가? 필자는 금번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재해위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도민안전실에 물었다. 민간에 대한 행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재해예방'과 '안전보장'에 대한 질문이다. 운 좋게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행정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재해 예방과 도민의 안전보장은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자 약속이다.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면 전남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민간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면 행정적 방안 등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관련법 안전기준에 의해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 위험이 있는 상태'인 'E등급' 공동주택은 달리 말하면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다. 붕괴 위험 건축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그리고 사용승인 변경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고민은 민간의 역할이지만,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은 지자체의 몫이다. 사유재산권과 안전권을 함께 연계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때문에 재해 예방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마저 느껴진다.

주민 안전 위한 따뜻한 행정

여러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재해 예방과 더 촘촘한 도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한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된다. 하지만 막상 재해가 발생하면 훨씬 더 많은 유·무형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붕괴 위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소재로 이 글을 적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 주체라면, 행정기관은 사유재산 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도 함께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공공 관리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해 'E등급'이라는 단어가 전남에서 하루빨리 사라지고, 취약계층도 안전에 소외받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 더불어 '안전 대도약'이 함께 펼쳐지길 기대한다.

에세이



김한호

문학박사·수필가·문학평론가

오늘도 아내와 함께 징검다리를 건넜다. 광주천을 산책할 때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서도 징검다리를 놓아준 고마운 사람들을 잊고 살아왔다. 우리 주위에는 징검다리처럼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는 부모 형제, 훌륭한 은사님, 좋은 친구들, 마음씨 고운 사람들은 징검다리가 돼 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징검다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냇물을 건너는 징검다리나 디딤돌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징검다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이어주며, 디딤돌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준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징검다리나 디딤돌 같은 사람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며

많을수록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그중에는 징검다리나 디딤돌 같이 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림돌이나 누름돌 같이 괴롭힘을 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운명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선생님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6·25전쟁 말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밤중에 병약한 입산모가 태기를 느끼자 선친은 목숨을 걸고 의사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왔다. 가까스로 태어난 아이는 까무러쳐 울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 아이의 생명은 은혜로운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선행은 징검다리처럼 이어가야 한다. 그동안 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기도 했으며,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곤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징검다리나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되도록 서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시냇물 속에 있는 돌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 시냇물

속에 돌들은 흘러가는 물결과 부딪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낸다. 시냇물소리가 아름다운 까닭은 물속에 크고, 작고, 둥글고, 모난 돌맹이들이 흐르는 물과 어울려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각각색의 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물살이 조절되고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곳이다.

인생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에 서로 징검다리가 돼 주고 디딤돌이 돼 줘야 한다. 그리하여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서로 돕고 배려하며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오늘은 물이 불어난 징검다리를 건너며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내는 내 삶에 있어서 징검다리라고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징검다리가 고마운 디딤돌인 줄 알면서도 잊고 살듯이 아내에게 그냥 무심하게 지내왔다. 그런데 아내의 고마운 마음을 새삼 느끼면서 징검다리를 건너니, 시냇물소리가 아내에게 잘해 주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위험천만 '자라니족', 안전운행 준수를

록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모 및 보호장비 착용, 운행 전 자전거 점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끌고 건너기, 야간

운행 시 라이트 켜기, 음주과속운전 금지 등을 지키는 올바른 안전운행 준수로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법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주목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케미'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28일 오전 도청에서 개최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이 대거 참여해 8기 상생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테이블에 올린다. 앞서 상생발전실무위원회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신규 협력 과제 11건을 확정된 바 있는데, 이번에 시·도 지사가 만나 이를 집중 논의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전에도 화동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군 공항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 모드를 보였다. 두 단체장은 반도체 단지를 대구·경북까지 확대 추진하고 의대 설립이 광주와 전남 모두의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양여 방식으 한계가 있어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주지하는 것처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원회는 2014년 10월 구성돼 64개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 민선 7기에는 네 차례 개최돼 군 공항 이전 협력 등 상생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선 8기에는 더욱 밀착해 공동 발전을 꾀하는 일이 많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처음엔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면서도 현안이 꼬이면서 서먹서 먹해지고 회동이 뜸해지는 모습이 재연되지 않았으면 한다.

광주와 전남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발전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 의대 설립 등 광주가 도울 것은 돕고 전남도 군 공항 이전에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정부 주도로 해간다고 하지만 정부가 다 해줄 수 없다. 아울러 부산·경남과도 협력해 국토 남부지역의 제2수도권 부상을 추진하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갈 필요가 있다. 첫 단추가 이번 상생발전위원회인 만큼 어느 때와는 다른 결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경찰국 파동' 대화로 타협점 찾아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추진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뇌부와 일선 경찰관의 갈등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계기로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 특히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이 나자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집중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경찰의 내부 불만이 들끓고 있다. 여기다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면서 정치권도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류 총경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해 "우리 손으로 지켜드려야 한다", "정의는 죽었다", "지휘부는 정권의 입맛에 행동하고 있다" 등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했는데 그동안 개최된 검사회의, 법관회의는 테러입니까? 우리는 의견도 제시 못합니까?"라는 글을 올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을 문제 삼았다.

또 '장관 말대로 행동하는 식물 경찰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정부가 일을 키웠다', '말 잘 듣는 경찰 건드려 왜 들볶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냐?' 등의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경찰이 집단 항명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 그것도 일선 치안 담당 사령관이나 다름 없는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겠지만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된다. 행안부 또한 경찰 내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을 서두른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평경사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정부도 징계와 인사 등 감압적 조치만이 능사는 아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 가는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길임을 명심 하길 바란다.

광주폴리 대한민국 상징으로 자리잡길

기지수첩



이나라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이다. 매회마다 주제와 특징을 담아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소규모 문화 활성화 장치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1차 광주폴리는 옛 옛성터의 흔적을 따라 10개의 폴리가 설치됐고, 2차 폴리는 '인권과 공공공간'이며 1980년 5월 광주의 광장과 거리에서 일어난 민주화 정신을 8개의 폴리를 통해 재현했다. 3차 폴리는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도시의 일상'을 핵심개념으로 설정했다. 4차 광주폴리인 광주 톨게이트에 관문형 폴리 '무등의 빛'이 설치, 광주 관문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5차 광주폴리의 윤곽과 방향성이 나왔다. 배형민 5차 광주폴리 총감독은 27일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세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해 제 5차 폴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리의 건축학적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광주폴리는 광주 옛 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관광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다.

국제적 유명 건축가, 예술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 공공예술디자인의 뜻을 입으면서 문화도시 품격을 높여왔다. 단순한 건축물을 뛰어넘어 공공 공간 속에서 장식적인 역할 뿐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까지 아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하고 있는 것

2011년 폴리가 처음 설치될 때만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작품에 따른 관리 부실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크고 작은 진통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역 곳곳에 스며든 광주폴리는 이제 지역민들에게 익숙한 문화적 장치가 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광주폴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역부족하다는 점이다. 광주만의 특별한 자산이지만 전국적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폴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화가 약하다. 배형민 5차 폴리를 기점으로 폴리를 확고히 할 목표로 5차 폴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차 광주폴리를 기점으로 광주폴리가 전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길 소망한다.

독자광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가 언제부터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일명 '자라니족'이라고 불리는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 의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라니'란 갑자기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가끔씩 시내 주행을 할 때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위태롭게 운전하는 자전거를 때문에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자전거를 타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외부 활동 여건이 좋을수